

제391회 국회(정기회)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21. 10. 5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 . 일반 현황	1
II . 주요 과제 추진 현황	3
1.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	3
2.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	7
3. 방송통신 성장 지원	9
4.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	13
III . 주요 현안 과제	17
1.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(전기통신사업법) 개정 후속조치	17
2.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(안) 제정 방안 마련	18
3.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	19
IV . 참고 자료	20
1. 2021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	20
2.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	21

I.

일반 현황

□ 연 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20. 8. 1.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- 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 PP 관련 정책
- 방송광고정책, 편성평가정책, 방송진흥기획, 방송정책기획
- 방송통신시장조사, 방송통신이용자보호, 시청자 권익증진, 인터넷 윤리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 야	법 률 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) • 방송법 (일부) 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• 방송문화진흥회법 •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•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 •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 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• 전파법 (일부)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조직 : 1처 3국 2관 17과(담당관) 3팀 / 1소속기관



○ 정원 : 276명

(’21. 9월 현재)

구분	정무직	공무원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본부	5	6	5	13	18	71	112	230명
소속기관	-	-	-	1	-	5	40	46명

□ 예산 및 기금 : (’20년) 2,587억원 ⇒ (’21년) 2,472억원 [△115억원]

○ (재원) 일반회계 520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952억원

○ (기능) 인건비 240억원, 기본경비 43억원, 주요사업비 2,189억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양승동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김명중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권태선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김기만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조한규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Ⅱ.

주요 과제 추진 현황

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

□ 개 요

-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으로서 미디어의 공적기능이 약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
- 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허가·평가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공적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필요

□ 추진 실적

①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

- (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·승인 및 평가)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·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·승인 제도 마련 및 방송평가제도 연구
 - 심사기준, 절차 등 허가·승인 제도개선(안)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운영('21.6월~)
 - 방송평가 취지, 사업자간 변별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(정책연구, 6월~12월)
 - (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평가)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적책무 부여 및 엄격한 평가 추진
 - 재허가 제도를 '공영방송 협약제도'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·논의(6월~) 및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련 KBS와 업무협약의 실시(9월)
- ※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서비스의 목록·유형,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

- (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) 공영방송(KBS·EBS 등) 이사선임 시 후보자 명단 공개, 국민의견 청취 및 면접절차 신설 등 투명성 강화
※ 방문진 이사 임명(8.11.), KBS 이사 추천(8.25.), EBS 이사 임명(9.13.)

② 미디어 공공성 강화

- (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)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등과 관련된 종편·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(1~4월) 및 이행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한 방송사 현장실사 실시(5~6월)
- (지역방송 활성화) 지역밀착형·경쟁력 강화·신유형 프로그램 제작지원 (16개사 35개 프로그램, 34억), 콘텐츠 재제작·해외 콘텐츠마켓 참가(베트남 Telefilm, 6월) 등 유통활성화 지원, 광고·편성 규제합리화 방안* 등 마련
* 지상파(지역방송 포함) 중간광고 허용(21.7월 시행), 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완화(30→20%, 22.1월 시행) 등
- (지역라디오 신규허가) (구)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지역 청취권 확보를 위해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(‘21.8.4.) 및 심사 기본계획 마련(‘21.9.15.)
- (공동체라디오 활성화) ‘04년 도입되어 17년간 7개 방송국에 머무르던 공동체라디오를 전국적으로 20개 방송국을 신규허가(‘21.7월)하여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 위상 정립
- (교육콘텐츠 제작 지원) 비대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환경을 반영 하여 EBS의 교육콘텐츠가 초등학생·장애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30편(13.6억원)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(AR/VR) 제작 지원
- (남북 방송·통신 교류 지원)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을 제고 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(TV 1편, 라디오 1편)·방영(4분기) 및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(9.30)
-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추진(연중)

③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

- (종합계획 수립) 일상화·국지화되어 가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'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' 수립('21.8.31)

< 종합계획 주요 내용 >

- ◆ (빠짐없는 재난방송) 국민 모두가, 언제 어디서나 사각지대 없이 재난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계 개선
- ◆ (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제공)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 기반 마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난방송 실시
- ◆ (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방송) 전국 1만명 재난방송 '시민안전통신원' 운영 및 교육, 수어통역사 재교육 등
- ◆ (재난방송 관리·운영체계 효율화) 재난방송 법체계 정비, 중앙·지방 재난방송 협의회 연계 강화, 재난방송종합상황실 구축 등

- (재난방송 고도화)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, 정보 공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 '재난방송 종합상황실' 구축
 - 지상파 4사, 종편·보도PP의 재난방송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재난방송 요청 체계 마련(~11월)
- (코로나19 등 올바른 재난정보 제공) 재난 CCTV 영상, 재난유형별 행동요령, 재난 위험지역의 재난정보 등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와 방재기관·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(연중)
 - KBS를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·재해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* 및 재난 CCTV(36개) 타 방송사와 공유(연중)
 - * '21년 9월 기준 국민행동요령 49종 제작 완료, 연내 29종 추가 제작 예정
 - 강원지역의 효율적 재난대응 및 방송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'21.4.22)

※ 방통위·강원도·KBS춘천총국·춘천MBC·원주MBC·MBC강원영동·G1방송

- (재난수어방송 강화) 수어 통역사 재교육을 지원하여 재난수어방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방송 전문통역 인력풀 확대('20년 100명→'21년 200명)

④ 방송 자원 구조 개편

- (수신료제도 합리성 제고) 수신료 산정과 사용내역의 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개선 추진

-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및 수신료 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, 수신료위원회*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** 논의 지원

*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, 경영,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

** (방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) 수신료 회계구분·사용내역 공개: '20.6월, '20.9월, '21.5월 발의, 수신료위원회 설치: '21.5월 발의

- (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) 학계·법조계·전문가·업계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·운영('21.2월~) 및 정책연구 추진(6월~)

- (방발기금 통합 및 효율적 사용) 기금 운용의 신축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법안(방송통신발전기본법, 변재일 의원 발의('20.7월)) 입법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공영방송 협약(안) 최종안 마련 : '21. 12월
-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* 실시 : '21.하반기

*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업무협약, 사업자 간담회 등

②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

□ 개 요

- 인터넷·스마트폰의 대중화와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공론의 장을 훼손
- 불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물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필요

□ 추진 실적

①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

- **(팩트체크 활성화)**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("팩트체크넷")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시민 간 팩트체크 협업을 지원하고, 협업 결과물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
 -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교육자료 등 팩트체크 자료를 DB화(1월~)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추진(5월~)
 - 팩트체크의 신속성·정확성 제고 시스템 고도화 및 플랫폼 탑재 추진(5월~)
- **(팩트체크 역량강화)**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지원, 청소년·성인·교사 등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확대(2월~)
- **(공모전 개최)** 팩트체크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팩트체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하는 팩트체크톤 행사 개최(8.28)

②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

- **(코로나19 관련 대응 강화)** 코로나19 관련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 및 「코로나19 백신 가짜 뉴스 대응 종합대책」 마련('21.2월)
 - 방통위 - 질병청 - 주요 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체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삭제·차단(2월~)

③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

- (디지털성범죄물 근절) 디지털성범죄물 삭제, 유통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
 -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·차단체계 운영,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이행점검(1분기) 및 책임자교육 실시(7월~)
 -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필터링 기술 및 디지털성범죄물 공공 DNA DB 개발 및 제공(8월)
 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(안) 마련(8.30)
- (불법스팸 규제 강화) 불법스팸 조기차단을 위한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(5월~) 및 도박중독, 대출사기 등 국민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팸데이터개방 시스템 운영(5월~)
 - ※ 통신사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, 통신가입 권유 스팸 감축을 위한 데이터 개방 업무협약 체결('21.6월, KISA-KAIT)
- (인터넷상 아동·청소년 보호 강화)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인 '사이버안심존'을 확대('20년 1,843개교→'21.8월말 2,085개교)하고 성착취물 유통이 빈번한 다크웹 차단기능 도입(6월)

④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

- (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) 임시조치 기간 단축(30→20일), 및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(박광온 의원 '21.1월), 사이버 명예훼손죄 신설(윤영찬 의원, '20.7월)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지원
- (디지털시민역량 제고) 시민 스스로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전국민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(3월~), 사이버·인터넷 윤리체험관 콘텐츠 개발(6월~)

□ 향후 계획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 : '21. 11월
- 대국민 인터넷윤리 체험주간 '아름다운 인터넷 세상' 개최 : '21. 12월

③ 방송통신 성장 지원

□ 개요

- 경쟁심화로 구조적·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방송통신사업자 지원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

□ 추진 실적

① 미디어산업 활력제고

- (방송시장 활성화 추진) 방송광고·편성규제 개편 등 낡은 규제 해소와 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'방송시장 활성화 방안' 수립('21.1월)
- (편성규제 개선)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취지·실효성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 완화
 - 오락프로그램(종합편성), 주된방송분야(전문편성) 및 1개국 수입물(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) 편성비율 완화 및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'매반기·연간'으로 간소화(방송법 시행령 개정·공포, '21.4.30)
- (지상파 UHD 활성화) 더 많은 시청자가 실감형 초고화질 콘텐츠와 다양한 형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
 - UHD 전국망 구축을 위한 제주 KBS UHD방송국 허가(~'21.12월), 중소·지역방송사의 UHD 콘텐츠 제작·인력양성 지원 단계적 확대
 - 공익목적의 다채널 서비스(MMS) 및 이동형 서비스 시범방송을 실시('21.7월)하고 본방송을 위한 법령개정 병행, 정부·방송사·연구기관 협업으로 차세대 UHD 혁신서비스 발전모델 개발 추진

- (시청점유율 제도 개선) 실시간TV와 일간신문 영역에 한정된 시청 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·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
 - 방송프로그램별 시청시간·시청경로 등을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(6월~)하여 미디어 통계의 업계 활용도 제고
 - 시청률 등 민간 미디어 데이터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'미디어 데이터 협의체' 운영(3월~)
- (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안 마련) 온라인미디어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산업 발전 및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방안 마련('21)
 -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'시청각미디어서비스' 개념* 도입
 - * 지상파방송, 유료방송 플랫폼, 유료PP, OTT 등을 모두 포함
 - 서비스별로 경쟁 활성화·공익성·이용자 보호 등의 목적과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한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
 - *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반 운영('21.4월~)을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의 기본방향 및 서비스 분류, 진입규제 등 주요 규제사항 검토 중
- (라디오방송 활성화) 휴대 이동성으로 재난시에 수신이 용이한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활성화 정책 추진
 - (AM·FM 라디오 기능조정) AM 수신권역 내 표준FM 난청 발생 지역에 대한 수신환경 점검('21.3~5월) 및 검증('21.8월~)
 - (라디오방송 허가 및 지원) 신규 라디오방송 허가정책 기본정책 마련(연중)·재난방송 역할 강화, 라디오 발전지원계획 수립, 라디오 진흥을 위한 실행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라디오 지원 특별법 마련 추진(연중)
- (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)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프로그램 공동 제작비('21년 5억원)를 지원(2편)하고,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(11월)
 - 해외 주요국의 방송시장 현황 및 미디어 이용행태 등 조사 실시(연중)

②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

- (네거티브 규제 원칙)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규제를 원칙 허용·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('21~'22)
 -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수립방안 연구반 구성·운영('21.3월~)
 - 가상광고·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(고지 방식·허용횟수 등) 완화를 위해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및 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9.16)
- (광고규제 합리화)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와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한 광고규제 개선 및 시청권 보호 병행
 -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, 우회적 중간광고 방지를 위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, 중간광고 허용원칙*, 고지자막 크기의무 규정(방송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·공포, '21.4.30, '21.6.23)
 - *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 고려, 프로그램의 온전성 및 시청흐름 훼손 방지 등

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

- (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점검 등) SO 인수·합병 등 유료방송시장의 과점체제가 재편됨에 따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등 점검·제도개선 추진('21~)
 - 유료방송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, 거대 플랫폼사-콘텐츠사 간 협상력 변화로 인한 채널 공급계약·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공정행위 등 점검(6월~)
 -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정비 등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방송법·IPTV법 시행령 개정(개정안 법제처 심사, 9월~)
- (방송 제작·근로 환경 개선) 지상파·종편 대상 표준계약서 활용,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등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'21년 상반기 이행실적 점검(9월~) 및 방송시장 근로환경 개선방안 마련(~12월)
- (협찬의 투명성 제고)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을 위한 방송법(정부안 발의, '20.10.23) 개정 지속 추진, 제작경비 협찬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추가 개선방안 마련(12월)
 - 방송 제작·구성을 통해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(방심위 협조)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점검(4월~)

- (방송·통신 결합판매 법제 정비)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
 -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(과방위 전체회의 통과(9.14))
 - 유선판매점 사전승낙제*,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**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(~12월)
 - * 무선 판매점과의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시행('19.9월~)
 - ** 원스톱 전환서비스 운영 지침 및 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('20.7월~)
- (앱마켓 공정경쟁을 위한 법 개정) 인앱결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('20.10월~),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위한 법 개정 지원·시행('21.9.14)
- (망이용 환경 개선) 사업자 간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금지,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(연중)
- (규제 형평성 제고)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* 지정,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(3월~)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
 - *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('20.8월 시행)에 따라 법규위반 등에 대한 물품·서류 제출 대리
 -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(페이스북 등) 32개 사업자 대상 운영현황 등 실태점검(6월~)
 - 주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, 불법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에 관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계획(안) 마련(5월)

□ 향후 계획

-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: '21. 12월
-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: '21. 12월
-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: '21. 9월~

4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

□ 개요

- 방송통신 미디어가 사회·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개선하고,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

□ 추진 실적

①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

- (이용자 불편사항 개선)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 개설,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 운영 등 국민 불편사항 적극 발굴·개선
- (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) 빈발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,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 제공하는 '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' 가동(1월~)
- (단말기 이용자 편익 확대) 지원금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과 AS 비용 공개 유도 등 이용자 혜택 증진
 -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(15%→30%) 및 공시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(법개정안 위원회 보고(5월) 및 입법 예고(6월), 사업자의견수렴(8~9월))
 - 이용자의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말기 주요 부품별 A/S 비용 공개(8월) 및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자료 조사 실시(6~11월)
- (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)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,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·절차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(4→2시간)하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(8월)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9월)

- (모바일 앱 이용환경 개선) 선택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필수 앱 개념 명확화 및 삭제 기준 등을 구체화(12월)
 - 선택재 앱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전문가 연구반 구성·운영(8월~)
- (신유형 광고 대응) 온라인상 다른 정보를 가려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플로팅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(6월) 및 개선(12월)
- (신규 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) OTT, 라이브커머스 등 이용 규모가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(5월) 및 평가 실시(~10월)
 - 구독경제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앱 결제 및 해지 관련 피해 사례 모니터링(6월)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(10월)

②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

- (중장기 종합 지원체계 마련)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(10월) 및 장애인방송 의무비율 조정 등 관련 고시 개정 추진(연구반 운영, 6월~)
- (스마트 수어 방송 활성화)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사 스마트수어방송서비스 선정·지원(4월~)
- (장애인방송 VOD 활성화) 지상파 3사 대상 장애인 VOD 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을 EBS, 종편·보도PP, 일반PP 등으로 단계적 지원(6월~)
- (디지털서비스 기술개발) AI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을 자막-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 시연회 개최(4월) 및 시범서비스 운영(9월~)

③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

- (미디어교육 종합계획 추진)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「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(‘20.8월)」을 차질 없이 이행
 -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(4월~) 및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자료 개발(8월~) 등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
- (미디어교육 광역거점 구축)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구축된 7개 광역시·도(경남, 대구, 전북 등)에 센터 구축 추진(‘21.1월~)
 - ※ 경남 및 대구센터(‘22년 개관) 구축 예산 확보(50억원) 및 시공 협의
- (미디어교육 기관 연계 활성화)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 소규모 영상미디어센터, 미디어교육원 등과의 대국민 미디어교육 연계 활성화
 - ※ 카메라·캠코더 등 제작·편집용 장비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미디어 교육 시설에 대여하여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(‘21.8월 기준 16건)
- (온라인 미디어교육 활성화) 진로 특강, 영상 제작법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‘미디온*’ 활성화(‘21.8월 기준 262개 강좌 제공)
 - * 미디온(edu.kcmf.or.kr): 각 기관별로 실시하던 미디어교육 콘텐츠 공유·제공
- (소규모 밀착형 서비스 확대) 근거리 공공시설을 찾아가 생활 속 미디어 활용을 돕는 소규모 밀착형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(‘21.3월~)
 - 미디어 교육·제작 장비를 탑재한 ‘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’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및 체험 확대(‘21.8월 기준 99회 운영)
- (마을 미디어교육 확대) 지역 주민들이 유튜브, 팟캐스트 등을 통해 마을방송을 제작·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·컨설팅 지원 확대(‘20년 80개→’21년 90개 마을)
- (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) 정부부처(산하기관)-방송사(참여)-대학(인력양성)과의 연계·협력을 통한 시설·장비·인적자원 공유
 - ※ 대학과 연계한 지역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영리기관, 단체에 대한 수요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 및 컨설팅

④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

- (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) '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'(19.11월)을 기반으로 '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' 마련(6월)
- (이용자 역량강화)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관련 지능정보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체적 활용을 지원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(8월~)
 - ※ AI 알고리즘 원리를 학습하고 정보편향성 대응하는 방안 등 교육
- (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)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완화(허가 → 등록)하되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(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)하는 방향으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(과방위 전체회의 통과(9.14))
 -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(46개사('20) → 50개사('21))하고 위치정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
 - ※ 채팅앱 189개사업자 점검후 90개 사업자 수사의뢰, 주차관리앱 사업자 현장점검
- (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) 본인확인 연계정보(CI) 활용현황 실태 조사 및 보안점검(5월~), 신규 본인확인기관(토스) 지정(8월) 및 본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(7월~)

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

- (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제 마련) 전자상거래, 소셜미디어,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한 「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」 제정 지원(연중)
- (플랫폼-크리에이터 상생환경 조성) 동영상콘텐츠 유통 관련 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「온라인플랫폼-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」 마련(2월)

□ 향후 계획

- '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' 수립 : '21. 10월
-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 공개 : '21. 11월

Ⅲ.

주요 현안 과제

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(전기통신사업법) 개정 후속조치

□ 개 요

-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

※ 제50조(금지행위) 즉시 시행,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)는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주요 내용

- (하위법령 정비) 법 위임사항 구체화 및 신설된 금지행위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
 -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행령과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,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설 금지행위 위반여부 판단기준 등 마련
- (실태점검·조사)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, 점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('21.10월~)
 -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정책변경 등 지속 모니터링
- (의견수렴·지원체계) 주요업무 추진단계 마다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 등을 대외 공개
 - 학계·법조계·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정비반 및 점검조사반 운영(9.9~), 앱 개발사·크리에이터·소비자 등 의견수렴 추진
- (법준수 유도) 사업자별 구체적인 법 준수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글로벌 사업자의 법 준수 유도

□ 향후 계획

- 시행령·고시 등 하위법령안 마련 및 입법 예고 : '21. 10월~
-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: 계속

②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안 마련

□ 개요

- 온라인미디어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 및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방안 마련 추진

□ 추진 방향

- 방송법·IPTV법·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규율체계를 '(가칭)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(안)'으로 통합
- 공공성 제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영과 민영을 명확히 구분하고,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되 우리나라의 특수성 반영

□ 주요 내용

- (수평적 규제체계 도입) 지상파, 유료방송(SO·IPTV·위성방송), 일반PP, 종편·보도PP 등 현재의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체계에서 벗어나, 방송과 OTT 등을 아우르는 '시청각미디어서비스' 개념 도입
 - 규제자 관점의 현행 규제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체계로 전환
- (OTT 제도화) OTT의 미디어적 속성, 사회적 영향력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OTT를 '통신법제'가 아닌 '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제'로 제도화
 - OTT를 '시청각미디어서비스'의 하위 개념인 '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'로 개념화하고, 미디어 환경, 사회적 영향력, 경쟁 관계, 사업자 규모,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권으로 포섭 추진
- (공/민영 구분) 공영과 민영을 명확히 구분하여, 공영부문에 대해서는 '공적책무 협약제도'를 도입하여 공적역할을 강화하고, 민영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혁신 및 적극적 투자 촉진 유도

□ 향후 계획

-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: '21. 10월
-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: '21. 12월

③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

□ 개요

- 디지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고·편성 등 방송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송시장 활력 제고 지원
 - * 온라인 광고매출: '12년 2조 4,617억원 → '20년 7조 2,733억원 (291%)
 - 방송 광고매출: '12년 3조 5,720억원 → '20년 2조 7,157억원 (△24%)

□ 주요 내용

- (네거티브 규제체계)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허용·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
 - 세분화된 광고유형(7개)을 간소화하고 일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, 가상광고·협찬고지 등 형식규제 최소화 및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
 - ※ 방송 중간광고 전면 허용 등 비대칭규제 해소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해 분리 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 마련(방송법시행령 시행, '21.7월)
- (편성규제 개선) 규제 실효성 및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재검토하여 방송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규제 완화 추진
 - 전문가·학계 등으로 구성된 편성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편성 원칙 및 사업자 규모, 매체특성, 시청시간대를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(12월)
 - ※ 방송법 시행령('21.4월) 및 하위 고시('21.6월) 개정 : 오락프로그램·주된 방송 분야편성비율 등을 완화하고,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'매반기·연간'으로 간소화
- (이용자 권익강화)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광고·편성 제도개선 이후 제재수준 강화 등 사후규제 체계 정비
 - 시청자 영향평가, 제작경비 협찬에 대한 원칙적 고지 의무화, 유료 방송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등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방송 광고·편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 : '21. 12월

IV.

참고 자료

1 2021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

□ 입법 계획

법안명	주요 내용	국회제출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동통신단말장치 법정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변경 	12월 예정

□ 계류법안 현황

(2021. 9월 기준)

구 분	국 회 심 사 단 계		계
	과방위	법사위	
정부 제출안	8	0	8
의원 발의안	141	0	141
계	149	0	149

②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1. '21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

◇ ('20년) 14,582억원 → ('21년) 14,771억원 ('20년 대비 189억원, 1.3%)

□ (일반회계) '21년도 353억원, '20년도 대비 70억원 (△16.5%) 감소

-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·과징금* 관련 업무이관으로 수입 감소 예상(423억원→353억원, △70억원)

* '20. 8월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

□ (방발기금) '21년 1조 4,418억원, '20년도 대비 259억원 (1.8%) 증액

- 주파수할당대가 8,154억원(3,113억), 방송사분담금 1,866억원(△59억), 재산(이자)수입 15억원(△43억원), 기타수입 408억원(78억원) 예상
- 정부내부수입 911억원(△2,661억원), 기금예수금 2,827억원(753억원), 여유자금 회수 237억원(△923억원) 예상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과기정통부 공동관리

< '21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세 입 과 목	'20년 예산(A)	'21년 예산(B)	증 감	
			B-A=C	C/A*100
합 계	14,582	14,771	189	1.3
□ 일반회계	423	353	△ 70	△ 16.5
○ 과태료 및 과징금	416	344	△ 72	△ 17.3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7	9	2	28.6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4,159	14,418	259	1.8
○ 자체수입				
법정분담금(주파수할당대가, 분담금)	6,966	10,020	3,054	43.8
용자원금회수등(재산수입, 기타수입 등)	387	423	36	9.3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3,572	911	△2,661	△74.5
○ 기금예수금(공자기금 전입금)	2,074	2,827	753	36.3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1,160	237	△923	△79.6

2. '2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

◇ ('20년) 2,587억원 → ('21년) 2,472억원 ('20년 대비 △115억원, △4.4%)

□ (재원별) 예산 520억원 (△77억원), 기금 1,952억원 (△38억원)

□ (기능별) 인건비 240억원 (△1억원), 기본경비 42억원 (1억원)
사업비 2,189억원 (△115억원)

< '21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20년 (A)	'21년 (B)	증 감 (B-A)	%	
총 지출 <I+II>		2,587	2,472	△115	△4.4	
재 원 별	I. 일반회계	597	520	△77	△12.9	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총계 = ①+②+③+④+⑤)	1,990 (14,159)	1,952 (14,418)	△38 (259)	△1.9 (1.8)	
	① 지출	소 계 (a)+b)	11,872	12,532	660	5.6
		㉠ 방송통신위원회	1,990	1,952	△38	△1.9
		㉡ 과학기술정보통신부	9,882	10,580	698	7.1
	② 기금관리비	45	44	△1	△2.2	
	③ 정부내부지출 (공자기금예탁)	900	-	△900	순감	
	④ 예수이자상환(예수이자상환)	11	84	73	663.6	
	⑤ 보전지출 (여유자금 운용 등)	1,331	1,758	427	32.1	
기 능 별	□ 인건비	241	240	△1	△0.4	
	□ 기본경비	42	43	1	2.4	
	□ 사업비	2,304	2,189	△115	△5.0	
	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	287	239	△48	△16.7	
	②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	1,137	1,018	△119	△10.5	
	③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	758	787	29	3.8	
	④ 방송통신 운영지원	122	145	23	18.9	